평화재단 긴급 좌담회

PEACE FOUNDATION

북한 5차 핵실험,
북핵 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묻는다

일시 | 2016. 9. 17 (토) 오후 7:00 - 9:30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프로그램

북한 5차 핵실험, **북핵 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묻는다**

18:30	접 수	
19:00	개 회	
19:05	여는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9:10	사 회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19:15	발표 1	**5차 핵실험의 실태와 향후 북핵위기 국면 진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북한 핵실험과 각국의 대응 전망**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19:55	발표 3	**북핵위기 해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좌담회	
20:50	청중 질의응답	
21:30	폐회	

차 례

여 는 글 ····· 4

발 표 **5차 핵실험의 실태와 향후 북핵위기 국면 진단** ····· 5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북한 핵실험과 각국의 대응 전망** ····· 14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발 표 **북핵위기 해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 24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는 글

지난 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9월 9일 9시 30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핵탄두 폭발실험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정부의 대책은 대북 압박수준의 강화, 핵도발 시 응징 보복과 자체 핵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삼는 것도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간데없고, 북한의 행동을 뒤따라가며 사후 대응책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까지 시나리오에 넣어야 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대북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다시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실전배치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를 동결시키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북핵 위기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이라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한가위 명절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실 텐데도 흔쾌히 좌담회에 응해주신 패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하고,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발표

5차 핵실험의 실태와 향후 북핵위기 국면 진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김정은 권력승계와 북핵

1. 김정은 권력 승계

o 2008년 8월 김정일 뇌졸중, 10월 이후 거동, 현지지도시 김정은 동반
o 2009년 1월 8일 김정은 25번째 생일에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자 통보
- 2009.5.29 2차 핵실험 직후 당정군에 후계사실 통보
- 2009.12.25 당정군에 김정은 생일을 국가적 명절로 지정 통보
- 2010.9.27. 김정은 인민군대장 칭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부여

o 2010.10.10, 당창건 65주년기념식 김부자 참석, 김정은 후계 등극 공식화

2. 북핵 협상

o 2005.9.19 북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 2007.7.15 영변원자로 폐쇄
- 2008.6.27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o 2008.9.24 영변원자로 봉인해제
- 2008.12.4-5 북미 6자수석대표 싱가포르 회동
- 2008.12.8 남북 북핵 6차수석대표 양자회의 개최
- 2008.8-10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 합의 불발
- 2008.12 이후 6자회담 중단

o 2009.5.25 2차 북핵실험

3. 핵 전략 변화

o 김정은 후계구조 정립과정에서 북핵 협상 중단, 핵 개발 가속화

o 2009년 신년사 핵 포기 부정 내용 포함
- 2009.1.2 노동신문 사설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 2009.4, 장거리 로켓발사
- 2009.4.14, 6자회담 중단 및 영변핵시설 재가동 선언, IAEA사찰단 추방
- 2009.4.25, 5MWe 흑연감속로 핵연료봉 인출 재처리선언
- 2009.5.25, 2차 핵실험 감행

o 2013.3.31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회의(4.1)에 제출할 문건에 ‘경제·핵무력병진노선’ 채택
- 2013.2.12, 3차 핵실험 실시

o 2016.1.6, 4차 핵실험, 증폭핵분열 실험 추정
- 4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 핵탄두 실험 지시[1)]
- 2016.3.15, ‘탄도 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 2016.3.24, ‘고출력 고체로켓엔진 지상 분사실험’공개[2)]
- 2016.5, 7차 당대회시 김정은 핵보유국 및 비확산 언급, 과거핵 인정과 미래핵 담보 협상 의도

Ⅱ.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1. 핵실험

o 실질적인 무기화 수준 도달 추정
- 4차,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3)]
- 5차,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했으며,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되었다”[4)]
- 5차 핵실험 위력 10kt 이상, 증폭핵분열실험[5)] 및 핵탄두 실험 성공 추정

---

1)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TV, 2016.1.6
2) 대기권 진입 및 지상분사 실험은 남포 잠진리 소재 ‘태성기계공장’에서 실시 추정, 태성기계공장은 1980년 초 이미 미사일 제작공장 및 로켓발사대 등 주요 시설 완비, 사택 및 후방시설 포함 1개 노동자구 규모(2개리) 조성. 철도와 인접해 있어 북한 각지로부터 부품 수급 및 조립 후 완성품 수송에 용이
3) 증폭핵분열 실험 추정, 조선중앙TV, 2016.1.6
4) 조선중앙TV, 2016.9.9
5) 증폭핵분열 기술 적용 핵 탄두 실험 추정, 증폭핵분열 실험은 핵분열(원자탄)과 융합(수소탄) 중간단계루 탄두 크

ㅇ 핵 폭발 및 핵 탄두 관련 시험 완료, 실전배치 핵 탄두 제조 및 시험 단계 진입 추정

2. 핵물질

ㅇ 영변 원자로 및 우라늄농축시설(UEP) 이용,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HEU) 확보
- 2007.2.13, 10.3합의로 영변 흑연감속로 폐쇄, 2013 재가동 선언

ㅇ 플루토늄 40kg[6], 고농축우라늄 200kg 내외 핵물질 보유 추정[7]
- 핵연료 재처리 재개[8] 및 UEP[9]활용시 핵 물질 보유량 증가

3. 핵무기

ㅇ 2015년 2월 기준, 핵 폭탄 10-20기[10]
- 2013년 20기, 2016년 34기, 2018년 43기 보유가능[11]
- 2015년 2월 기준, 10-16기[12]

ㅇ 2016년 연말 20기 보유 전망[13]

4. 미사일

기 1/5 축소, 분열에너지 최대 5배 확보가능, 폭발력 증대 및 소형화에 필수, 수소폭탄제조 중간단계

6) 북한이 영변의 흑연감속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 8000기 처리시 추출 분량, 플루토늄 5kg 내외 핵 무기 1기 제작 가능

7) "플루토늄 12kg-38kg, 고농축우라늄 220kg 이상 추출 추정". 문장렬,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주최, 2014.2.7

8) 2016년 영변핵단지 관련설비 가동 징후 포착, IAEA 보고서, 2016.8.19. ""2016년 핵 재처리로 5.5-8kg 플루토늄 추가 확보", ISIS, 2016.8.22

9) 영변의 원심분리기를 사용 연 30kg의 고농축우라늄 추출가능, 25kg으로 핵무기 1기 제작 가능. 북한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 확장 공언, 기타 은닉시설을 감안 시 고농축우라늄 추정 보유량 증가.

10) 미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 2016.2.9. 히로시마 투하 리틀보이(Little Boy)의 경우 순도 94.2% 우라늄 235 54kg 탑재, 나가사키 투하 팻맨(Fat Man)의 경우 플루토늄 239 7kg 탑재 추정.

11) 문장렬,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주최, 2014.2.7

12) 2020년까지 저성장 시나리오 적용 20개, 중간 성장시나리오 적용 50개, 고성장 시나리오 적용 100개 확보가능. Joel Wit, 워싱턴 특파원 조찬모임, 2015.2.24

13) "북한이 300-400kg 고농축우라늄 비축량에 핵무기 5개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150kg가량을 추가 보유할 수 있을 것, 플루토늄 생산기술은 연 6kg로 6-8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32-54kg 비축 추정, 2016년 연말게 20개 핵 폭탄 제조가능 핵 물질 보유하게 될 것 " 지그프리트 헤커 언급, 38north, 2016.9.12

ㅇ 2016.2 발사 은하 3호(대포동 2호, 비행 12000km내외)는 우주발사체, 광명성 4호위성 탑재

- 은하 3호 우주발사체 기반 장거리 로켓 기술 개발 진행 추정

o ICBM KN-08, KN-14(10000km이상) 시험발사없이 실전 배치

ㅇ 중거리 무수단(4000km) 및 SLBM 북극성(2000km) 개발

- 2016.6, 무수단 1400km고도 및 500km 사거리 확보
- 2016.8, SLBM 북극성 고도 500km 사거리 500km 확보

ㅇ 핵탄두 탑재가능 실전배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이 실질적 대남 위협

- 스커드 B(300km), C(500km), D(ER, 700km-1000km), 노동(1300km) 탄도 미사일 900-1000여기 실전배치
- 스커드, 노동, 은하 3호 스커드 기반
- 무수단, 북극성, KN-O8 R27 기술 기반

o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사거리, 발사각도, 엔진 연소시간 조절, 공중폭발 등 다양한 방식의 발사를 지속, 핵탄두 탑재가능 미사일 전력 고도화 시도

- 대남 공격용 탄도 미사일 경량화 능력 확보 시도 개연성[14)]
- 2016.3.10, 스커드 미사일 2발 발사
- 2016.3.18. 노동미사일 800km 비행[15)]
-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능력 확보 했을 가능성"[16)]
- 2016.9.5. 스커드ER 추정 3발 동해상 발사 1000km 비행[17)]

---

14) '북 핵 미사일 방어(BMD) 대책', 북핵 대비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로의 길, KODEF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2016.5.19, p. 96

15) 대기권 고도 상승 후 하강 도중 폭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 및 계획된 특정 고도에서 기폭장치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폭발시킨 정황. SBS, 2016.6.3. 핵탄두 및 생화학 탄두의 경우 요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도 15-40km 상공 폭발시에도 효과 발생.

16) NYT, 2016.4.5

17) 3발 1분내 발사(2발은 동시 발사)로 사드 요격망 회피 시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내 동일지역 낙하

<표> 북한 미사일·로켓 개요

한미 명칭	Scud B	Scud C,ER	노동A 1,2	대포동1	무수단	대포동2	KN08	대포동 2개량	SLBM	KN 14	대포동 2개량
시기	84	91	93 발사	98.8 발사	07 배치 16.6 발사 성공	09.4 발사	12.4 공개 무시험배치	12.12 발사 성공	15.5 사출 16.8 성공	15.10 공개 무시험배치	16.2.7
소련 모델	R11	R 300	R21 SLBM 골프급		R27 SLBM 양키급		R27		R27 SLBM	R29	
미슬 명칭	화성 5	화성 6	화성 7		화성 10			화성 16	북극성 무수단 축소형		
로켓 위성 명칭				은하 1 광명성1		은하2 광명성2		은하3 광명성3			은하3 광명성4
거리 km	300	C500 ER 700-1000	1000-1300	6000 이상	3500-4000	6700이상	12000	10000-12000	2500	10000	10000 - 12000
제원 m kg	12.75 1000 1단 액체	12.75 1000 1단 액체	15.5 700 1단 액체	3단	12m 2단 650 액체	32m 3단 액체	20m 500 3단 액체	3단 100kg 액체	9m 2단 650 고체	17m 500 2단 액체	3단 100 액체
수량	700		300		50						
발사 방식	4×4 TEL	4×4 TEL	5×5 TEL	고정	6×6 TEL	고정	8×8 TEL	고정	SL BM	8×8 TEL	고정

Ⅲ. 북한의 핵전략

1. 북한 이란의 핵 문제 환경

o 이란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이

o 이란은 핵실험 경험이 없는 핵 개발 초기단계로 4차 핵실험으로 핵 기술을 축적한 북한과 차이
- 핵 무기를 실전배치할 경우 개발단계의 협상과 달리 북한의 협상력 제고

o 이란의 핵 개발 목적은 중동의 패권국가화, 북한의 경우 핵을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
- 이란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으로 중동 패권국가 지위 확보를 위한 자원의 확보 및 대미관계정상화로 사우디에 대한 견제효과를 기대

o 중동과 달리 동북아에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미중간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 북핵문제에 직간접적 영향

2. 김정은 '선 핵보유노선'

o 2009년 김정일의 'C plan'결정설[18]에 주목할 필요
- C plan 1단계: 사용가능한 핵무기 보유
- C plan 2단계: 핵보유국 지위 확보,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

o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병진노선': '선핵보유 후 협상'의도
-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19]
- 5차례 북핵실험, 6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 집권 5년에 불과한 김정은 정권에서 각각 3차례 실시, 선핵 보유의도 명확
- 7차 당대회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천명, 7차 당대회 핵보유국 및 비확산 언급, 과거핵 인정과 미래핵 담보 협상의도 내포
- 7차 당대회기간 및 이후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주목

3. 향후 북핵 행보 전망

o 김정은 핵전략에 의거 최단 기간내 핵 공격 능력 확보 주력 예상

---

18) 장롄구이, '점점 구체화되는 북한의 C계획' 내일신문 2016.5.19
19) 핵탄두 대기권 돌입 환경 모의시험장 현지지도 시 김정은 언급, 노동신문, 2016.3.15

- 소련 해체후 핵기술 및 인력 통제 약화
- 최근 핵 기술의 발달로 핵 개발 기간 단축

o 핵기술 완성을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상존
- 미사일 탑재 가능 핵탄두 소형화
- UEP 활용 핵탄두 제조
- 수소폭탄 개발 필요성

o 미 본토 공격용 ICBM 발사가능성
- 무수단 및 북극성 성공으로 유사기술을 적용한 KN-08, KN-14 발사가능성 상존
- 북한이 미 본토 타격 가능 ICBM 능력을 확보할 경우 동북아 안보 균형 요동, 미국이 군사적 option을 고려할 가능성[20)]

Ⅳ. 대응방향

1. 북핵 대응 전략 실패에 대한 성찰

o 대북 포용 및 압박정책 모두 북핵 개발 억제에 실패
- 북한 핵 전략에 대한 오판에 기인

o 6자회담의 실패
-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및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
- 기존 6자회담 구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o 창의적이고 새로운 북핵 협상 및 대응전략 모색

2. 궁극적 비핵화 정책 견지

o 사드, KAMD, 킬체인, 핵 추진잠수함, 핵확장억지력 등 모두 한계 노정
- 비핵화가 아닌 북핵 실전배치 시 대응 방안의 성격

---

20) "자위적 측면서 北 선제타격할 수도", 마이크 멀린 前 미 합합의장, '북한 핵 도발과 중국의 역할' 미외교협의(CFR) 토론회, 2016.9.16.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용 ICBM 능력에 근접할 경우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 금년 7월 미국이 김정은을 인권범죄자로 규정한 점에 주목할 필요.

o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 이외 대응 방안 부재라는 점을 자각, 궁극적 비핵화 노력 견지

3. 남북관계 활용

o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국면을 지속하되 남북관계 차원의 변화 모색
- 제재만으로 독재국가 및 불량국가의 태도변화 유도에 한계

o 전방위적 차원에서 북한과 채널을 개설,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및 협상 모색
- 7차당대회 직후 제의 군사당국자 회담, 대북 특사 파견 검토
- 2015년 김정은 신년사 제의 '최고위급 회담' 모색

4.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의 확대

o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 주민 및 엘리트층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관여를 확대

o 탈북자 전수구호, 북한 정보자유화, 북한인권상황 개입, 북한내 대안세력 형성 지원 등 김정은 정권 및 체제변화를 위한 전방위적 수단 가동

5. 창의적 북핵 대응체제 구축

o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 대중 압박 강화
- 북핵 문제가 동북아 및 아시아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의 소재로 활용되는 경향 방지

o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상황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파기를 의미
- 비핵화 원칙이 파기된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선택지 모색
- 기존 북핵 방어 및 대응 전략에 한계 노정, 전술핵 도입 및 핵공유정책도 최종 결정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에 한계[21]
-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가 명확할 경우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22]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착수 및 국민여론 확인 필요

21) 조한범, '이제 자위적 핵 무장을 검토할 때', 조선pub, 2016.9.1.
22) 한국의 핵 주권이 없을 경우 기존 북핵 방어 및 대응체계의 한계를 근거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 상존

북한 핵실험과 각국의 대응 전망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1. 북한 정세 개관

가. 북한 김정은 체제(2011.12-) 등장 이후 정치외교 현황

: 장성택 처형(2013.12.12.), 현영철, 김용진 처형 등 국내 권력기반 강화 추진

: 외교적으로 대미, 대중, 대러 관계 등 고립화 경향, 국제제재 가중

: 경제력 건설과 군사력 강화 등 병진노선 하 군사태세 강화 중점

나. 북한 전력 구조 및 규모[23)]

: 육군 전력-특수전 부대, 8만-20만 병력 추정(11군단 4만명, 정찰총국 1만 명 등)

: 해군 전력-동해, 서해 2개 함대 잠수함, 잠수정 70여척

2010년 현재 상어급 28척, 유고급 20여척, 로미오급 22척 등, 고래급 2000톤

2016년 현재 3500톤급 핵추진 잠수함 2척 건조 추정[24)]

: 공군 전력-핵탄두 탑재 가능한 IL-28 등 폭격기 80여대 보유

: 사이버 전력-비대칭 전력으로서 사이버 능력 강화 및 대외 위협적 운용

2013.3, 한국 방송국과 금융기관 사이버 공격

2014.11, 미국 소니 픽처 엔터테인먼트 사이버 공격

: 미사일 전력

- 스커드 미사일 약 600여기
- 노동미사일 약 200여기
- 무수단 미사일-사정거리 3,500킬로미터 추정
- 대포동 1, 2 등 총 1,000여기 보유 추정[25)]

* 2016년 8월, SLBM 발사실험 성공, 사정거리 2000 킬로미터 추정

: 핵탄두 능력-플루토늄 방식, 우라늄 농축 방식의 기술 보유

2015년 현재 20발 핵탄두 보유 추정, 2020년까지 100여발 보유 가능[26)]

2016년 1월, 핵실험, 수소폭탄 개발 단계의 boosted fission weapon 추정[27)]

---

23)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위협 현황과 대응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1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2).

24) 중앙일보 2016년 7월26일 기사.

25) CSIS report,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 An Independent Review of U.S. Defense Strategy in the Asia-Pacific (CSIS, January 2016). 북한 보유 탄도미사일 700기로 추정.

26) "Editorial: North Korea's Nuclear Expansion",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February 28, 2015.

27) Interview with Matthew Burn, analyst from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EMP 개발 추정, 공중 폭발 이후 전자시스템 등 마비

: 2016년 1월-8월까지 총 13회 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미사일 발사, SLBM 발사
일본 EEZ 낙하(2016.8.3.), 일본측 방공식별구역 낙하(8.24)
9월5일, 노동미사일 3기 동시 발사(9.5)

: 제3차(2013.2.12.) 및 제4차 핵실험(2016.1.6.) 통해 핵능력 증강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 파괴력이 10-20킬로톤으로 추정
히로시마, 나가사키 투하 원폭 파괴력에 상당

다. 전략무기 개발과 운용 부서 위상 강화 및 공세적 운용전략

당 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핵무기 연구소
전략군 사령부를 육해공군과 맞먹는 위상으로 격상, 핵 및 미사일 무기 관할
(미사일교도대->2012년 전략로켓사령부->2014년 전략사령부, 김락겸 대장)

라. 전략무기 개발에 따른 군사전략 변화 및 전망

: 2013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사실상 폐기 선언

: "핵 선제 타격전" (2016.3.7., 국방위원회 성명, 3.9 김정은 발언)
종심이 깊지 않은 지형 조건에서 미국 첨단 장비와 특수부대 기습공격 무력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은 선제공격 (2016.3.7., 외무성 성명)

-> 선제타격 표방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억제력 강화 차원의 bluffing 성격도 있겠지만, 북한 군부는 선제타격의 독트린을 구현하는 태세를 구축하려고 할 것

마. 전략무기 운용 전망

북한 군사능력은 재래식 군사력 의존 단계를 탈피,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동시운용 가능한 군사능력 보유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및 SLBM을 핵탄두 운반수단으로 운용할 것,

-> 한국 측 영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투하하면서 한국 압박 가능성 존재
한반도 유사시 이와 더불어 사이버 전력 등을 운용해 동아시아 배치 미국 핵심 전력 견제, 병력전방 전개 차단하고, 핵우산 무력화 기도

Affairs. Christina Pazzanese, "Nuclear nervousness North Korea probably didn't detonate an H-bomb, analyst say, but isolated nation's program is gaining sophistication" Harvard Gazette, January 7, 2016.

-> 장사정포,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등으로 한국 중추시설에 대한 마비를 도모하고, 한국의 굴복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

2. 동북아 각국 대응

가. 중국- 신형대국으로서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기존 미국 주도질서와 충돌,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북중관계 유지

1) 자신을 신형대국으로 인식하면서,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과는 양자대결이 아닌 마라톤과 같은 세력 경쟁관계 추구[28]
이 과정에서 아태지역 미국 전방전개 태세 및 동맹구조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파워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2) 2015.5, 중국 국방백서, 군사전략 제시[29]
미국 리밸런싱 전략 경계,
일본의 군사 안보정책 변화가 역내 질서에 중대 불안 야기
적극방어(Active Defense) 전략개념 재확인
해양전략 적극화 중점,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의 전환 표방
종전 근해방어에 더해 원해 호위(Open Sea Protection) 동시 수행

3) 중국적 국방개혁 방안 공표 및 추진(2016.2)
병력 절감 및 해공군 및 전략미사일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둔 군 전력 현대화,
기존 7개 군구(military area command)를 육해공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5개 전구(theater command)로 개편[30]

4)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화
2013.11, 중국이 동중국해 ADIZ 설정 선언
남중국해 파라셀 및 스프라틀리 도서에 활주로, 레이더, 미사일 기지 등 건설
2016.7, 필리핀이 제소하여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중국 영유권 부인 판결에 불복 의사 명시
동중국해 센가쿠(중국명 釣魚島) 방면에 대한 해경국 소속 함정 연속 파견

5) 북중관계가 종전 혈맹관계에서 보통국가 관계로 변화하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핵심이익의 하나로 간주

---

28) Liu Mingfu, The China Dream: Great Power Thinking and Strategic Posture in the Post-American Era (2010: CN Times Books, 2015).
29)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China's Military Strategy (May 2015).
30) Jiang Jie, "China unveils five new theater commands" Global Times, 2.2, 2016.

한중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동맹 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주한미군 기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은 미국 영향력 약화 의도한 반응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기존 보유 동풍-5 미사일 등의 다탄두화 및 미사일 전력 강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31)]

6) 북한 핵능력 강화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찬성 등을 통해 견제
16.9.10, 중국 외교차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소환해 핵실험에 대한 항의 의사 전달. 그러나 북한 지역에 반중적 정권 등장하는 것에 반대, 북한과의 경제교역 지속 의향

나. 미국-오바마 행정부 아태지역에 대한 리밸런싱 전략 기조 견지

1) 기본적으로 미국은 유럽과 아태지역 내에서의 도전 세력 부상 저지가
전통적 안보전략 기조, 양 지역 동맹관계 구축 및 잠재적 적대세력 예방에 중점

2)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2)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협력 증진
중국과 상호 오해, 불신 감소 노력 추구[32)]

3) 미 국방성, 아태지역 해양안보전략(2015.7)
미군 전력 강화, 동맹국간 협력 강화로 억제태세 구축
군사외교 및 지역안보구조 발전으로 신뢰구축 노력[33)]

4)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 접근
: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대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 전개, 대중 압박
센가쿠 제도, 일본 시정 하 영역 인정(미일 2+2 및 가이드라인)
: 다른 한편 양자간, 다자간 접촉 확대를 통해 대중 engagement 정책도 병행
미중 정상회담, 양국군 군사교류 확대 및 상호 군사훈련 통보 합의
미중 전략경제대화(2015.6.24.) 등 양국 지도부간 대화 지속
미중 양국, 공중충돌 회피에 관한 행동원칙 합의(2015.9),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규범 다자간 합의(2014.4)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5) 한반도 정책
한미동맹을 아태지역 리밸런싱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및 핵우산 제공 공약 중시
2016.9, 전략폭격기 B-1B의 괌 기지에서 한반도 전개

---

31) "Editorial: China buys into multiple warhead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y 21, 2015.
3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ebruary 2015).
33)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2015.7)

일본 주둔 제7함대 전력의 한반도 수시 전개

주한미군 사령부 이외 미국 전략사령부(STRATCOM), 북미 방공사령부(NORAD) 차원에서의 한반도 관심 증가

북한 핵개발을 오바마 행정부 "핵 없는 세계" 구상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압력 가중,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추진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다만 미국내 일각에서는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한 북한 핵증강 저지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 제안도 제기됨[34]

다. 일본 아베 정부 안보정책

1) 아베 정부의 안전보장전략 방향- 국가안전보장전략(2013.12)[35]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전력 증강,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있어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시도 등을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인식

: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일본 안보체제 강화, 미일동맹 강화, 한국, 호주, 아세안 등 국가와의 안보협력관계 강화 등을 표방

2) 일본의 국내적 안보태세 강화 정책

: 종전 평화헌법 하에서 표명해온 비군사화 정책 및 원칙의 일부를 폐기

: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기(2014.4), 이후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 방산협력 강화

: 집단적 자위권 용인, 각의 결정(2014.7)

: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따라 안보관련 11개 법안 제, 개정 (2015.5-2015.7)

3) 미일동맹 강화

: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반영하여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2015.4)
미일안보협력 범위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 대응(중요영향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위협 대응(집단적 자위권 적용) 등으로 확대

: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미일간 공동대응태세 강화
2015.11.3., 나가타니 방위성 대신, 미국 카터 국방장관, 말레이시아 회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현상변경 시도 반대

: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미일간 대응체제 강화
2013.5.10., 미일 양정부, 제1회 사이버 대화 개최,

---

34) Joel S.Wit, "How to stop North Kore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September 14, 2016.
35) 國家安全保障會議及び閣議決定,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4)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 포함 역내 대외 안보협력 범위 확대

2015.5.30., 미국,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

남중국해 중국측 준설 작업에 대한 우려 표명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반대

2015.6.4., 아베 수상과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 회담

필리핀에 대한 방위장비품 지원과 공동훈련

2015.6.21.,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간, 공동 해상훈련

5) 북한 핵능력 증가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

2013.12, 아베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내용

2016.9, 나가타니 전 방위성 장관의 한국 학술회의 발표

6) 북한 핵 및 미사일 대응 체제 구축 현황

: 1998년 대포동 발사 이후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공동 개발 착수

2007-08년, 지상배치 PAC-3와 해상배치 SM-3 테스트 이후 실전 배치 완료

미사일 방어기능 포함된 자동경계방공통제시스템 JADGE(Japan Air Defense Ground Environment) 구축

2015년 11월, 나가타니 방위상, 2018년까지 THAAD 배치 추진 공표

2016년 8-9월, 북한 노동미사일이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내,

SLBM이 일본측 방공식별구역에 낙하한 사실에 경계

-> 향후 일본 내에서 적기지 선제공격론, 일본의 미사일 개발 능력 강화 등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음

라. 전체적으로 21세기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행위자와 구조 측면에서 불안정성

: 행위자 측면에서 중국의 국제해양질서 관련 규범 도전, 북한의 국제핵질서 규범 도전 등 일부 국가 현상변경적 경향 노정

구조적으로 미중관계, 중일관계, 해양 영유권 분쟁 둘러싼 잠재적 대립 가능성

: 미중간 해양전략경쟁, 중일간 센가쿠(댜오위다오) 둘러싼 해양경쟁 등도 지역질서 안정 교란 가능성

: 북한 제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능력 개발 등이 동아시아 지역 군비경쟁 격화의 발화점이 되고 있음,

중국의 미사일 다탄두화, 일본의 적기지 선제공격론 대두 등

3. 한국 정부의 안보정책 현황과 과제

가. 대북정책 현황

1)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경제 및 외교수단으로 북한발 안보위기가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군사적으로 핵 및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2) 그러나 드레스덴 선언(14.3.28.) 등 대북정책이 북한측 반발 초래

: 2015.8.24.-25, 김관진-황병서간 이룩된 남북 합의(당국자간 대화 재개, 민간 교류 재개)도 후속조치 불발

: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 대북 제재 및 개성공단 폐쇄 결정(16.2.16)으로 남북접촉 창구가 차단된 상황,

: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 폐쇄 속에서 남북관계 대립과 긴장 국면 고조
북한 붕괴 및 정권교체 전략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최근 경향이 주변국 협력확보에 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수세적, 방어적 대응의 한계를 보임

: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은 전력개발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음
공군 방공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 대공방어무기체계- 나이키, 호크 PAC-2(요격고도 20-30킬로미터), 이지스함 SM-2 (요격고도 150킬로미터, 250-500킬로미터)

: 2020년대까지 KAMD 체제 구축 추진 중, 고도 20-50킬로미터 요격 가능
미국 위성정보 하에 PAC-2 요격미사일 가동,
2015.3, 방위사업추진위원회, PAC-2를 PAC-3로 개량 결정
(요격고도 40킬로미터, 레이시온사 개발)
2020년 중반 도입하게 될 차기 이지스함에 SM-3 (요격고도 500킬로미터) 탑재 계약

: 2016년 8월, THAAD 도입 결정은 기존 취약한 미사일 방어망 보완 의미
(요격고도 40-150킬로 미터, AN/TPY-2레이더 및 발사대 포함,
미군 전체로는 4개 포대 보유, 이 가운데 1개 포대를 한국 배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미사일 방어망은 불충분(일본이나 이스라엘 비교)

4) 한미동맹에 의존한 대북 군사적 억제태세 강화 추진

: 남북 접촉 및 대화 부재, 북한 군사위협 증대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 억제태세 강화에 중점 두는 대응 경향 노정

: 2014.10.23., 한미양국,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20년대 이후로 재연기 결정

: 한미 연합훈련 증대를 통해 대북 억제태세 강화에 중점

: 지나친 한미동맹 의존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국군 자체 전략 수립 능력 소홀 등 대내외적으로 부작용 낳을 소지도 있음

5)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외교적 대응에 중점
(6자회담 개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 등)
국방차원의 대응은 미흡

나. 동북아 지역 정책 현황

1)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 관계안정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긴요
양자, 다자 레벨에서의 협력외교 필요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 남북한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국가안보전략 방향으로 제시[36)]

2) 그러나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종군위안부 문제가 최우선 이슈가 되면서 2년 반 이상 한일간 정상회담 및 외교안보관련 장관 협의 불발
2015.12,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간 합의 발표 이후 한일관계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대한 신뢰도 저하, 한국정부내 대일 불신감 유지 등으로 상호 협력 기조 회복은 지체되고 있음,

3) 한일관계에 비해 박근혜 정부 초기 한중관계는 활발, 한중 정상회담 수차례 개최, 안보측면에서도 한중간 협력 기조
2015.9.3.,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5.12.31., 한중 국방부간 직통전화(핫라인) 개통
: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미사일 배치 결정(2016.7) 후 한중관계 급거 악화 기조 전환

: 박근혜 정부 안보정책 전반적 방향 재검토 필요
: 대북 및 동북아 지역정책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안보정책의 위기 봉착
대북 및 역내 질서에 대한 정책 전반적 재평가 및 방향 조정 필요

다. 대북 정책 방향-군사적 대응

: 북한 미사일 전력 강화, 핵탄두 미사일 탑재 시도, SLBM 발사로 기존 KAMD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노정, 한계점 보완 필요
: 북한 전략사령부 대응 우리측 공세적 전력 건설 및 지휘체계 강구
: 정보탐지 능력, 위성 능력,
: 미사일 전력, 해상초계전력, 잠수함 전력 증강 필요
기존 P-3C를 대체하는 P-8 해상초계기
4000톤급 원자력 잠수함

36) 청와대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2014.7).

: 육군 미사일 사령부, 공군 방공사령부, 해군 잠수함 전단 등 Kill Chain 지휘기구 능력 강화->공세적 타격 전력 지휘기구 창설 추진,

: 국방부, 방사청, ADD 차원 전력증강 계획 공세적 전력으로 방향 전환 필요

: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제태세 강화
한미연합사 차원의 협력 이외 미국 전략사령부 핵억지력 제공 협력 확보
미국과의 실효성있는 핵우산, 확장억지 제공으로 한반도 핵균형 필요

라. 대북 정책 방향-정치적, 외교적

: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 내부 붕괴를 염두에 둔 듯한 대북 정책이 강공 위주로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고 필요,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 협력을 언제까지 얻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

: 북한 내부를 뒤흔들고 나아가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적극적 평화공세, 대화공세 병행이 필요

-> 국가안보실장(김관진)-총정치국장(황병서) 간 대화 채널 재개 제안도 해봄직

: 외교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려는 정책 병행도 고려,

마. 동북아 지역협력 정책

한미동맹 강화에 더해, 한일관계, 한중관계의 복원 및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우방간 안보협력 추진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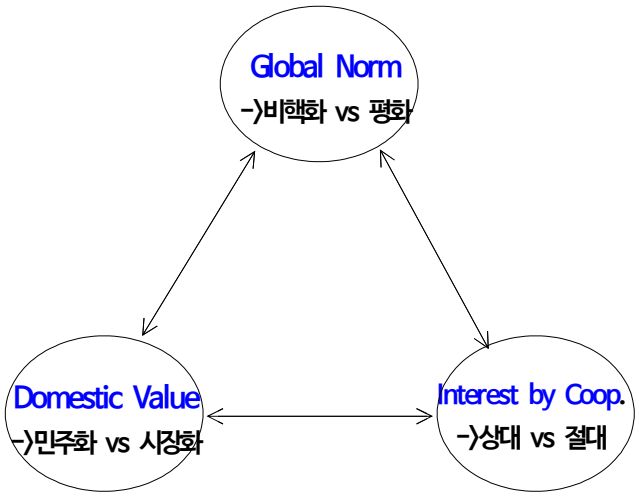
유엔 총회,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다자기구 활용 바람직

북핵위기 해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북 정책은 아래의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나, 각 목표(pole)의 내포가 구조적 변화기에 돌입하여 혼선을 초래 중**

대북 정책 3대 지향



- Global Norm: 확고한 글로범 규범이었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Peace & Stability)이라는 규범과 교차 중
  - 북한의 잇 다른 핵/로켓 실험에 따른 비핵화의 효과성 문제가 부각
  - 무엇이 중심인가에 대한 혼선이 시작 중

- Domestic Value: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했던 북한의 국내 레짐 변환의 목표가 가시화
  - '개혁 개방과 시장화'에 머무르던 북한 국내 정치 레짐에 대한 목표치가 '북한 민주화와 인권의 전면적 개선'으로 상향 조정 중
  - 비핵화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핵을 관리 통제하는 북한 레짐의 민주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 한편으로 여전히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북한 정권 변화의 중요한 목표라는 통합 이론에 근거한 포용정책이나 점진주의가 존재

- Interest: '국가이익'이라는 고유한 영역의 이슈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항존
  - 최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북방경제 논의가 부상되고, 한국의 (경제적) '미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통일 문제가 재 강조되며 이익문제의 성격이 변환 중
  - 북한과 이익 교차가 발생하면서 절대 수익(absolute gain)보다는 상대 수익(relative gain)에 대한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으나, 북방경제론 등의 발상은 절대 수익에 더 친화적임은 부정하기 어려움

□ 대북 정책은 위 3가지 pole을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국면에 돌입하였음

- <비핵화/민주화/상대수익> 패키지가 <평화/시장화/절대수익> 패키지와 구분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조합도 현실적으로 가능함

- 남북관계가 어느 하나의 pole을 희생하면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였고 따라서 3각 pole 각각의 목표는 다른 pole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 대북 제재(global norm)를 위해 개성공단(Inter-Korean Interest)을 닫는 것과 같은 정책 도구화는 위 3각 pole 간 병행 추진론의 본질에 위배
  - 비핵화를 위해 통일 (민족) '이익' 이슈를 포기하는 식의 접근법은 모든 국가가 국가의 핵심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외교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움

- 요컨대 3대 pole 사이에서 속도 조절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어떤 개별 pole 이슈에서도 역진론은 배제해야 함
  - 특히 교류협력 영역의 역진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先교류 後정치군사>론의 약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됨

□ 북한의 핵 실험은 비핵화 목표의 실패 여부를 평가할 때가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가 되었음

- 패턴화된 위기가 누구에게 이득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고 있음

- 북한 핵 실험 -> 확장 억지와 제재 -> 북한의 기술 능력 추가 과시 -> 한미 확장 억지 군사 연습 강화 및 최강 대북 제재 ->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 추가 도발 -> 한반도 분쟁 지역화 ?

- 도발 -> 제재 -> 대화라는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강조하지만, 그 전제는 제재의 예방능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제재가 핵실험 자재 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왔지만 결국 실패하였음을 인정해야 함

□ 협상으로 나아간다면 입구에서 동결 카드의 도입이 불가피

- 최강 제재론의 결말은 결국 북한의 레짐 변환일 것인데, 그것의 성공을 위한 타임 테이블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내외의 정책 합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 현재로서는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로켓 실험을 동결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임.
  - 북한 핵 무시 전략의 심리적 레드 라인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반증이 국내 핵 보유론의 강화임

□ 동결식 협상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회 협약형 정책 합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

- 입구와 출구를 나누고 입구와 출구간의 타임 테이블을 길게 가져가고 각 페이스마다 다양한 정책 옵션들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

- 당면해서는 대화의 병행을 제안하고 수해 지원과 같은 카드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